



원자력 G5 진입과 최고의 안전성 확보

- RT(Radiation Technology) 육성 기반 확충 -

과학기술부

서론

2000년 우리 나라 원자력 총규모는 9조 4,978억원(1999년 대비 8.3% 증가)으로, 우리 나라 GDP의 1.8% 수준을 점하고 있다. 2001년 원자력 발전량은 1,120억kWh로서 전년 대비 2.7% 증대되었으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관은 2001년 말 현재 1,822개 기관으로서 2000년(1,692개 기관) 대비 7.7%가 증가하였다.

원자력 분야 전체 인력은 2000년 말 현재 32,395명(1999년 대비 4.2% 증가)으로, 원자력 발전 분야 18,078명,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분야 14,317명(1999년 대비 9.1% 증가)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으로 원전 사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타발전원(發電源)에 대한 원자력 부문 경쟁력 제고와 원전 관련

산업의 대외 개방에 대비한 원전 설계·건설 핵심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발전 부문과 비발전 부문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진하여 우리 원자력의 선진화가 요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력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민영화에 따라 가동중 원전의 성능 향상 및 효율적 이용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기업간 합병 및 제휴, 신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 공조 등으로 향후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를 포함한 9개국이 제4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국제포럼(GIF)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혁신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그램(INPRO)을 추진중에 있다.

1980년대 이후 원자력 사업이 정

체되었던 미국 정부가 2001년 5월 발표한 「국가 신에너지 정책」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 정책을 표명한 바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의 의학적·농학적·공업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도 2000년 150억달러에서 2006년 300억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노 기술(NT), 생명 공학(BT), 신소재 개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활용될 양성자 가속기 개발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 기술은 부가 가치가 약 20배에 달하여 세계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06년에 약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 전면핵실



협금지조약(CTBT) 등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미국 9.11 테러 사태로 원자력 시설의 방호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002-2006)」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이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내외 원자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G5 진입과 최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원자력의 수출 산업화 정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도 성과

2001년은 과학기술부가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등 원자력 진흥 시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

1. 원자력 이용 개발 증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제251차 회의가

2001년 7월 개최되어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건설 추진 현황」이 보고되었다.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1차 계획(1997~2001)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국 등 세계 원자력 시장의 변화와 국내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등 국내외 원자력 환경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계획 기간(2002~2006) 동안, 1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140만kW급 신형 발전용 원자로,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 고연소도 신형 핵연료를 개발하는 등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과학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원자력의 의학·농업·공업적 응용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매출액 기준 6,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원자력산업을 수출 산업화하여 6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설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 정착과 예방 안전 강화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임을 천명하였다.

「원자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표준 설계 인가,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허가 등 제도 신설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이용 개발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 산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원자력 정책 및 연구 개발, 사회적 합의 및 국제 협력, 응용 진흥 및 인력 양성 등의 3개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2001년에는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 등 7개 연구 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1,673억원을 투입하였다.

새로운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Westinghouse 원전용 개량 핵연료, 원자력 제어 해체 기술, 지뢰 탐지 기술, 핵연료 노내(爐內) 조사 시험 설비 개발 등 신규 과제가 착수되었고, 원전 안전성 향상, 현장 애로 사항 지원을 위한 「원자력 현안 지원」 분야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선진국의 첨단 연구 개발

- GIF : Generation-IV Nuclear Power System International Forum
-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NPRO :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NPT :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제를 지원 하는 「선진 기술 확보 사업」의 확대 및 원자력 인적 기반 확충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신설 등 연구 기반 확충 사업을 확대·개편하였다. 그리고 암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 등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2. 원자력 안전성 확보

정부는 가동 원전 16기, 건설중 원전 4기,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 시설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안전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였다. 영광 5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하여 운영허가를 발급하였으며, 가동중 원전에 대해 10년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정부·사업자간의 공감대 구축 및 효율적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현장」을 제정하고, 「원자력안전증진기획단」을 구성하여 10대 안전증진 과제 선정 등 원자력 안전 증진 대책을 마련하였다.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원전 인근 주민, 시민단체와 원전 운전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를 증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과 원자력 검사 활동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원자력 비상 상황 발생시 방사능 방재 대책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과학기술부 내에 설치·운영중이다. 아울러 현재 설치·운영중인 「자동 경보 시스템」과 「원격 감시 시스템」,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시스템(CARE)」의 기능을 보강하고, 전원전으로 확대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관리 및 환경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여 동위원소 안전 관리를 위한 지식 정보 및 「방사선원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토 및 해양 환경 방사능의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 원전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를 39차례 개최하여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3. 원자력 국제 협력 강화

2001년도에 브라질·체코·우크라이나·이집트와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캐나다·프랑스·러시아·중국 등과 양국간 원자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원자력 기술의 수출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

반 조성 사업」에 35개 과제 13억원을 지원하였다. 베트남·중국·우크라이나 등 수출 대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 훈련 과정을 국내에 유치하여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세계원자력청년과학자대회」, 「아태원자력협력협정 국가대표자회의」,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등 국제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기술협력국장으로 김병구 박사가 선임되는 등 IAEA 진출이 26명으로 확대되었다.

중국 진산(秦山) 원전에 운전 요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기술 용역과 기자재를 해외에 수출하였고, 연구용 원자로용 핵연료를 미국·프랑스·아르헨티나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핵연료는 국제적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와 개발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도 원자력 정책 방향 및 추진 계획

금년도 원자력 정책 방향은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거 원자력 이용 진흥과 최고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원자력 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균형된 육성,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개발 역량의 결집, 선진 원자력 안전 규제 체



제의 정착에 두고 있다.

첫째, 원자력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중소형 원자로, 양성자 가속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산·학·연 연구역량의 결집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방사능 방재 체제 및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 수요가 증대하는 RT(Radiation Technology:방사선 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의료·산업·환경·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다.

넷째,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북경수로 안전성 확인을 지원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수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원자력 안전 감시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원자력 기본 정책의 추진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2002~2006)」은 2000년대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

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 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발전 및 원자로 개발, 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원자력 발전 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국민 이해 기반 구축,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력 기반·첨단 기술 개발, 원자력 인력 양성·확보, 원자력 외교 및 국제 협력 등 11개 부문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부문의 시행 계획인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 종합 계획(안)」이 2001년 12월 수립되어 공청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원자력법 관련 고시의 제·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가칭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과 「원자력 시설의 방호와 원자력 방재 대책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력 이용 개발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 기능을 보강하고 관계 기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및 선진화 추진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원자력 환경과 과학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2002년도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2년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먼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을 반영하여 추진한다.

원자력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자로 기술 및 핵연료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RT(방사선 기술) 분야를 확대하며, 원자력 안전성 제고 및 규제 기술 선진화를 위한 안전분야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해수 담수화, 전력 생산, 열병합 발전 등에 적합한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해외 수출로 연결하고, 독자 기술 소유권을 보유한 신형 핵연료 설계·제조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로 기술과 연계한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제4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국제 포럼(GIF) 및 IAEA 혁신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INPRO) 참여 등 미래에 대비한 선진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111명으로 구성된 2002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기술 분야 및 사업별 과제 평가, 조정 및 선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국가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종합 성과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3.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은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과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보장된다.

이를 위해 1호기당 1주채관을 목표 현장 중심의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정보 기준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전 운전 경험을 체계화한 통합 안전 관리 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원자력이 세

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발전토록 하기 위해 안전 인증 제도 도입 및 원자력 안전 마크(KNS)의 제정·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의 평가 방법·기준·절차 등 상세 지침서를 마련하고, 고리 및 월성 1호기의 평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 안전 성능 평가, 안전 검사 평가 등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평가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운전중인 원전에 대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검사, 사용전검사 등 각종 검사에 대한 검사관 자격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 공로자 포상 등 원자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4. RT(방사선 기술) 분야 육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방사선 분야의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방사선 이용 분야 매출액을 2000년 1,755억원에서 2006년 7,500억원으로 증대하고, 방사선 이용 기관을 3,000개로 육성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국산화율 제고 및 해외수출 등을 기본 목표로 하는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 종합 계획」을 2001년 12월에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하여 방사선 이용 진단·치료 및 의료 영상 등 첨단 의료 기술 개발, 농산물 품종 개량·멸균과 같은 농업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방사선 공업 분야의 이용 기술 개발 등 전략적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에는 양성자 가속기, 전자빔 발생 장치 등 대용량 RT 기반 시설과 단반감기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을 위한 권역별 싸이클로트론의 시범 센터 설치 운영을 검토할 것이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용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로」이용자협의회와 포함 「방사광가속기」이용자협의회 등 여타 RT 기반 시설과의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 정읍 지역에 추진 중인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선을 이용한 농업·생명공학·환경 분야 연구와 실용화를 추진할 것이다.

RT 분야 육성을 위한 가칭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며, 비파괴 검사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검토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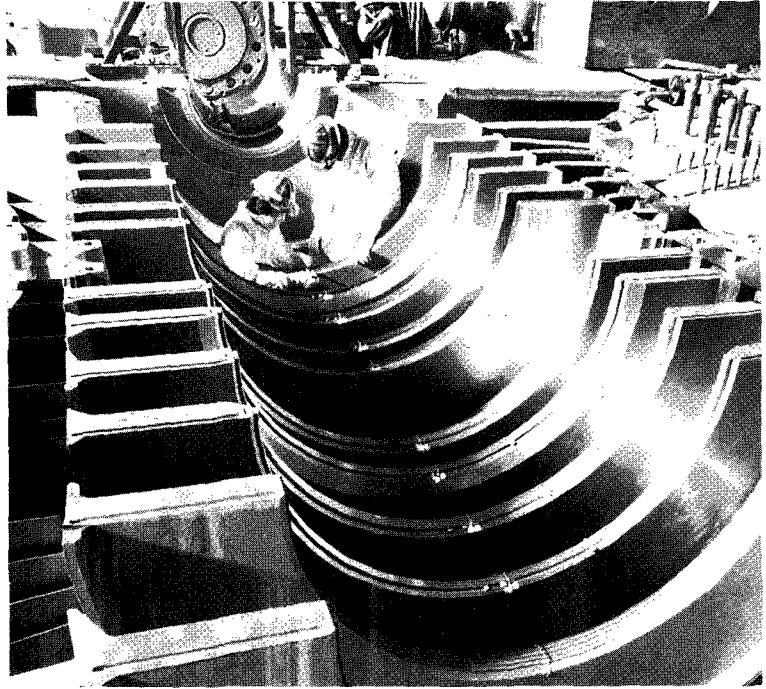
방침이다.

5.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원자력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미국·캐나다·러시아·프랑스·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선진 기술 이전 및 제3국 공동 진출 협력을 추진하고, 베트남·모로코·이집트 등 개도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향후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칠레·루마니아·핀란드·인도네시아·남아공 등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2년 3월 서울에 개소하는 「아태 원자력 협력 협정(RCA)」 사무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수출 기반 구축 및 선진 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한 원자력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원자력 분야 고위 정책 결정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표준형 원전, 연구용 원자로, 개량형 핵연료, 암치료용 동위원소



금년도 원자력 정책 방향은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거 원자력 이용 진흥과 최고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원자력 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균형된 육성,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개발 역량의 결집, 선진 원자력 안전 규제 체제의 정착에 두고 있다.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 기술의 수출 방안도 마련하며,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원전인 APR 1400에 대한 홍보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훈련 과정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고, IAEA 등에 한국 전문가 고위직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완공 예정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북한 규제 요원 훈련 센터를 활용하여 북한 안전 규제 요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및 법령 구축을 지원하고,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안전 규제 지원 기능 보강도 추진할

- 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IYNC : International Youth Nuclear Congress
- FNCA :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것이다.

그리고 IAEA 안전 조치 강화에 따라 추가 의정서에서 요구되는 국내 안전 조치 체제를 보강하여 국내 원자력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IAEA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IAEA와의 안전 조치 분야에 대한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에 개최되는 「제2차 세계 원자력청년과학자대회(IYNC)」, 「제24차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국가대표자회의」, 「제3회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것이다.

6. 원자력 방재 체제 확립

2001년 과학기술부에 신설된 「원자력방재과」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능 방재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의 방사능 비상 계획서를 수립하고,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과 「자동 경보 시스템」, 「원격 감시 시스템」,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시스템(CARE)」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며, 지방 자치 단체 및 관련 기관의 방사능 방재 계획을 정비할 것이다.

또한 2002년 준공 예정인 원자력병원의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체

제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대(對)테러 대비 정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방사능 테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원자력 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을 포괄하는 가칭 「원자력 시설 방호 및 원자력 방재 대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국토 환경 방사선 감시 체제를 보강하여 환경방사능측정소 10개를 13개로 증설하고, 무인 감시 포스트도 현재 17개에서 30개로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7.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의 합리화

의료·산업·첨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관리 제도를 합리화하고, 방사선 이용 기관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성 동위원소 선원별, 방사선 기기 및 사용 유형별로 적합한 안전 규제 모델을 정립하고, 작업 종사자에게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면허 제도를 사용 유형별로 적합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IT(정보 기술)에 기반을 둔 방사선 안전 및 유통 관리 체계를 보강할 것이다. 방사선 안전 관리 통합 전산망을 활용하여 인터넷

을 통한 민원 처리, 기술 정보 제공 등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증진과 함께, 방사선원의 수입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방사선 종사자 피폭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사선종사자중앙등록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

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원자력 시책과 사고·고장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고,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원자력소식」, 「NGO 광장」을 통해 시민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원자력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전달하는 민간 주도 정보 센터의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원전의 안전 활동, 주민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원자력 안전 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각계 주요인사·지역 주민·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시민 참여 간담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